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인 사 말 씀

2021. 10. 6.

금 융 위 원 회

I . 인사말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을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Ⅱ.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①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먼저,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2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융권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금융 완화정책으로 부채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소위 ‘금융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겠습니다.

<②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다음은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입니다.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①디지털 혁신산업과
②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뉴딜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3.8조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혁신기업에 대해 기술력·미래성장성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IPO 지분율을 확대하며,
비상장·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따라
현재 1조원 규모의 뉴딜펀드가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3,0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

다음은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 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적극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2월부터 도입·시행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다음은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서민금융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사고의 방지,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하여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Ⅲ. 마무리 발언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정무위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적정 예보요율에 대한 검토 상황을
6개월 마다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보고 자료의 별첨 자료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과열된 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distruptive) 변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경제·금융 시스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금융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튼튼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